

특 별 기 고

中·韓수교 19년, 더 튼튼한 ‘다리’를 위해



엔 평 란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

오늘은 중·한수교 19주년 기념일이다. 1992년 8월 24일 맺은 중·한수교가 19년이 흐르면서 양국관계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수교 19년 이래 양국의 빠른 발전 속도와 광범위한 협력, 그리고 교류의 깊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보기 드문 것이다. 중·한 양국은 1992년 수교를 시작해, 1998년 협력동반자관계를,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어 끊임없이 새로운 단 계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양국 국가지도자들의 빈번한 접촉은 교류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했다. 지난해 후진타오 주석이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원자바오 총리는 방한해 제3회 중·한·일 지도자회의에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상하이세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양국 간 경제무역협력은 끊임없이 확대되어 무역액은 수교 초기 50여억 달러에서 2010년 2071억 달러로 증가해, 한국 대외무역 총액(8916억 달러)의 23%를 초과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1 무역파트너이자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상대국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양측은 이미 130여 쌍의 자매 도시 관계를 맺었고, 매주 820여 개의 항공편이 양국간 운항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은 7만9000여 명,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은 6만8000여 명에 이르러 양국은 상호 간 최대 유학생 왕래국이 되었다.

중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자아카데미는 한국에 벌써 17곳이 개설되었고, 한국의 많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는 중문과가 개설되었다. ‘한류’와 ‘중국풍’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며 각자의 장점을 더욱 잘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9년 6월 18일에 설립된 중국

주광주총영사관(업무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은 중국정부가 한국에서 설립한 세 번째 대표기구이고, 호남지역에 있는 유일한 외국총영사관이다.

중국 주광주총영사관은 설립 이래, 중·한 우호협력을 위해 업무지역과 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업무 지역에 있는 각 기관, 단체, 기업, 시민 등 كافة 인사들의 중국 방문을 위한 비자 서비스를 제공했고, 각종 국제회의 및 포럼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리’를 만들어 업무지역 내 도시, 학교 등 기관, 단체가 중국과 우호교류를 전개하도록 적극 추진해 왔다. 우리 총영사관의 소개와 추천을 통해 광주 시 남구는 중국 충칭시(重慶市) 바난(巴南)구와, 광주시 보문고등학교와 광주우(廣州)시 지신(執信)고등학교, 우석대학교와 광시(廣西)공업대학교, 전주시와 중국 쑤이린(蕪林)시 취엔쑤우(全州)현 등이 우호교류관계를 맺었다.

또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리 총영사관은 소식지를 편찬해 중국 주요 뉴스, 중국 문화 및 관광 자원을 소개했다. 시민 여러분이 총영사관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저희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gwangju.china-consulate.org/ko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

중국정부는 시중 일관 독립자주적 평화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평등호혜의 기초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지방정부 간의 교류도 마찬가지로다.

광주시와 중국 광저우시는 자매도시 관계를 맺었고, 옌타이(煙臺), 선양(沈陽), 우한(武漢), 따리엔(大連) 등 도시와 우호협력관계를 맺어 각 영역의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산업, LED, 신에너지자동차 등에 우위를 지니고 있고, 문화예술적 풍토가 짙게 배어있으며 관광 자원도 풍부해 중국과의 협력 분야에 여전히 많은 잠재력이 있어 광주와 중국 협력의 전망은 매우 밝다.

중·한 우호 관계의 강건함과 안정적 발전은 친애하는 광주시민, 전남·북·제주도 민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중한 관계와 중국 발전에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지지를 희망한다.

또 앞으로 중국 방문, 관광, 투자, 창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중국 주광주총영사관은 여러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리나.

그저 약만 받아 잡으고 허공만 쳐다보시다가 갑자기 옛날 일을 지금 일처럼 물어보신다. 정말 애처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직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만 정상이다. 병원에 서도 지금보다 더 심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홀로 사시는 것이 너무나 불안해서 딸 집 아니면 요양 시설이라도 제발 가지자고 간곡히 말씀드려도 집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고 단호히 고개를 저으신다. 한번 ‘아니다’ 하시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고집 하나로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헤쳐나오신 분이 다. 장모님의 인생, 너무나 서글프다.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인지 예순이 넘는 지금까지도 장모님을 ‘엄마’라고 부르며 나를대로 잘 모셔왔다. 장모님의 한평생을 새삼 뒤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헤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두 글자에 합당한 것인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본다. (수필가)

※이 글은 은펜클럽 회장 이상욱씨의 유고입니다. 고인은 지난 20일 자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 때문이다.

시내버스를 활용한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비용은 대당 3500만원으로,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비추하지만 효과는 월등하다. 고정형 단속카메라의 경우 설치 후 2~3개월만 지나면 단속효과가 현저히 떨어지지만 버스단속시스템의 경우 설치 시내버스 노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단속이 가능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점, 따로 단속인력이 필요없는 점 등 장점이 있다.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점차 다른 노선으로 확대 여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9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임방울국악제, 정음성국제음악제, 10월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 세계김치문화축제 등 다양한 국제행사와 문화행사가 잇따라 열리게 된다. 광주를 방문하는 이들이 광주의 수준 높은 교통문화에 감동하고 다시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광주공동체를 위한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광주시 교통안전과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김규근·광주시 서구 송촌동

광주 찾는 외지손님에 교통질서 보여줍시다

행복한 창조도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4년 연속 교통사고 발생 전국 1위라는 광주의 부끄러운 자화상 속에서 이러한 목표를 위해 불명예를 벗기 위해 ‘교통사고 전국 최저수준 감축’을 민선 5기 100대 과제로 채택하고, 매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10% 감축을 목표로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운동’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해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103대와 이동단속차량 14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고정형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피해서 불법 주정차와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가로변의 불법 주정차를 피해 시내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다치거나 놀라는 사례, 충돌이나 접촉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해 엄격한 단

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그 대책으로 주요 간선도로를 경유하는 순환01번, 진월07번, 침단09번, 봉선37번 4개 노선 10대의 시내버스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장착해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5시30분~7시30분 사이 1회 적발로 과태료(승용차의 경우 5만 원) 부과 대상이 되며, 주정차 위반은 매일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 10분 내외 간격으로 운행하는 2대의 버스에 장착된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경우 이 단속정보를 토대로 관할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승용차의 경우 4만 원) 부과대상으로 관리된다.

이들 4개 노선이 선정된 배경은 제1순환도로와 상무·금호·중앙지구를 순환하거나 각기 다른 방향에서 시내를 관통하고 있고, 버스전용차로의 노선이 길어 단속효과가 크

600여개뿐이라고 한다. 전국의 말기 암 환자 숫자로 볼 때 필요 병상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규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말기 암 환자들의 3분의 1 정도는 사망 한 달 전까지 일반 병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고 있다.

호스피스 병동은 특성상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다. 때문에 병원들이 적자부 무서워 호스피스 병동을 늘리지 못하는 것이다. 병원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중환자실과 응급실 활용을 줄이는 것과 흡사하다. 이런 점에서 국가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김규근·광주시 서구 송촌동

정리하고,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한다. 죽음의 문턱에 선 본인이 외롭지 않고 삶이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통증과 호흡곤란이 찾아오면 의료진들로부터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즉, 말기암 환자가 불필요한 항암치료를 받지 않고 통증 조절을 하면서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호스피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호스피스 병상은 전국에



이 상 욱

며칠 전 처가 제사에 참석을 했는데 하루 뚱하며 시부모님 영정에 재배 드리는 여든네 살의 장모님을 보면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열일곱 살에 시집을 오신 장모님은 장인 어른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바람에 실희 생활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그만 6·25 사변이 일어나 장인어른은 행방불명되고 친정 식구들도 지주라는 이유로 모두 학살당했다고 한다.

그 기가 막힌 운명 속에서도 사십 년 동안 매우 얌전한 시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짓고 딸 둘을 키우셔서 근방에서는 억척스러운

과수책으로 소문이 났고 또 효부상도 받았다고 한다.

처가는 하루에 열댓 번씩 시내버스가 다니는 시의 변두리에 있다. 장모님은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출가한 두 딸이 서로 모시겠다고 끈질기게 권유해도 “나는 내 집이 편하다” 하시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시고 딸, 강아지를 식구 삼아 그곳에서 홀로 살아오셨다.

아들들 못 낳으셔서인지 외손자들을 끔찍이도 귀여워하셔서 그분들은 학교 다닐 때 혼날 일이 생기면 두 말 할 것 없이 외가로 도망갔다. 그러면 장모님은 전화를 걸어 절대 나무라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나서야 놔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근년에 와서는 우리 큰놈이 낳은 쌍둥이 증손자들을 애지중지하셨는데 쌍둥이가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 대도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고 마을 경로당에 가시면 그 애들 자랑만 하셨다.

그런데 그 장모님께 갑자기 치매가 찾아

광주 찾는 외지손님에 교통질서 보여줍시다

행복한 창조도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4년 연속 교통사고 발생 전국 1위라는 광주의 부끄러운 자화상 속에서 이러한 목표를 위해 불명예를 벗기 위해 ‘교통사고 전국 최저수준 감축’을 민선 5기 100대 과제로 채택하고, 매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10% 감축을 목표로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운동’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해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103대와 이동단속차량 14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고정형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피해서 불법 주정차와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가로변의 불법 주정차를 피해 시내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다치거나 놀라는 사례, 충돌이나 접촉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해 엄격한 단

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그 대책으로 주요 간선도로를 경유하는 순환01번, 진월07번, 침단09번, 봉선37번 4개 노선 10대의 시내버스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장착해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5시30분~7시30분 사이 1회 적발로 과태료(승용차의 경우 5만 원) 부과 대상이 되며, 주정차 위반은 매일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 10분 내외 간격으로 운행하는 2대의 버스에 장착된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경우 이 단속정보를 토대로 관할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승용차의 경우 4만 원) 부과대상으로 관리된다.

이들 4개 노선이 선정된 배경은 제1순환도로와 상무·금호·중앙지구를 순환하거나 각기 다른 방향에서 시내를 관통하고 있고, 버스전용차로의 노선이 길어 단속효과가 크

600여개뿐이라고 한다. 전국의 말기 암 환자 숫자로 볼 때 필요 병상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규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말기 암 환자들의 3분의 1 정도는 사망 한 달 전까지 일반 병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고 있다.

호스피스 병동은 특성상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다. 때문에 병원들이 적자부 무서워 호스피스 병동을 늘리지 못하는 것이다. 병원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중환자실과 응급실 활용을 줄이는 것과 흡사하다. 이런 점에서 국가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김규근·광주시 서구 송촌동

정리하고,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한다. 죽음의 문턱에 선 본인이 외롭지 않고 삶이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통증과 호흡곤란이 찾아오면 의료진들로부터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즉, 말기암 환자가 불필요한 항암치료를 받지 않고 통증 조절을 하면서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호스피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호스피스 병상은 전국에

시 설

서민·자영업자만 명드는 가게대출 규제

최근 금융 당국과 은행권의 어설픈 탁상행정식 대처로 서민과 자영업자들만 골탕 먹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가게대출이 급증하자 연간 가게대출 증가율을 7%로 묶지 못하는 은행은 강도 높은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농협 등 일부 대형은행들이 갑자기 신규 가게대출을 중단한 것이다.

은행 대출창구가 한순간 쏜공 얼어붙었고 이는 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출계획을 짰던 금융 소비자들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가게대출 중단 조치는 철회되기는 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가게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재개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일선 창구에선 거의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바람에 돈줄이 막힌 서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자가 비싼 제2급 융ทุน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은행권이 올 추석 특별자금 대출을 과격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대출 제한이라는 벽에 부딪혀 자영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금융위와 은행권의 졸속 조치에 서민,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만 골탕먹고 있는 것이다.

800조 원을 넘어서는 가게부채 대책은 시급하다. 가게의 건전성이 악화될 상황에서 금리 급등이나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같은 외부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바로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돈줄을 끊는 충격요법은 잘못된 대응이다. 이사철 전세자금이나 대학 등록금, 긴급한 생활자금, 추석자금 등 필수불가결한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했다. 위험수위에 이른 가게부채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견인차 무법질주, 경찰 뒤통만 질 전가

시내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는 으레 견인차 3~4대가 차로 하나를 차지하거나 인도에 불법주차해 걸 경우 자동차 한 대 당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그들의 장사속일 뿐이다.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줄 뻔히 알면서도 무모한 운전을 한다는 게 있을 법한 일인가.

그럼에도 경찰은 인력 부족 타령만 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에 단속 경찰이 3명도 채 안 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부다. 견인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때도 인력 운용할 것인가.

단속 인력을 늘려 지속적으로 엄한 단속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현행 처벌규정을 고쳐서라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벌 집서와 타인의 안전이 무시되는 사회라면 더 이상 경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

20%나 늘어나 그 심각성을 더해 준다. 견인차들의 난폭운전은 정비업체에 사고 차량을 견인해 줄 경우 자동차 한 대 당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그들의 장사속일 뿐이다.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줄 뻔히 알면서도 무모한 운전을 한다는 게 있을 법한 일인가.

그럼에도 경찰은 인력 부족 타령만 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에 단속 경찰이 3명도 채 안 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부다. 견인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때도 인력 운용할 것인가.

단속 인력을 늘려 지속적으로 엄한 단속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현행 처벌규정을 고쳐서라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벌 집서와 타인의 안전이 무시되는 사회라면 더 이상 경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

無 等 鼓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새로 부임하면, 간단한 고사성어로 자신의 가치관 또는 생활철학을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集毀卵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김학의 신임 광주고검장이 좋은 예다.

그는 울산과 인천지검장 시절에도 이 고사성어를 사용했는데, ‘동지가 부서지면 속에 들어있던 알이 깨진다’는 말이다. ‘복소무완란(覆巢無完卵)’이라는 고사성어와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공자의 20대손인 공옹(孔融)은 후한 말기 한제(獻帝)의 건안 연간(196~220)에 조조(曹操) 부자 밑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건안7자(建安七子)중 한 명이다. 공옹은 당시 조조가 50만 대군을 몰아 유비를 손권을 치려하는데 반대하면서 몇 마디 불평을 내뱉었다.

이에 화가 난 조조는 공옹 일족을 모두 잡아들여 죽일 것을 명령했다. 공옹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홉 살이고 작은 아들은 여덟 살이었다. 병사들이 공옹을 체포하려 왔을 때 두 아들은 마침 장가놀이를 하고 있었다.

공옹은 잡혀가면서 병사들에게 “처

벌은 나 혼자 맡아서 끝내게 해주시고, 두 아이는 다치지 않게 해주시오.”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자 공옹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새둥지가 뒤집히는데 알이 어찌 깨지지 않겠습니까(覆巢無完卵).” 결국, 두 아들은 장가를 다 두고 아버지와 함께 불잡혀가 처형당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답게 ‘법이라는 동지가 부서지면 동지 속에서 안전하게 살던 국민도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라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동지가 국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법이든, 생활

의 틀을 만들어가는 정치든, 아니면 수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이든 해석은 마찬가지로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기업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상황에서라면, 기업어든 직원어든 ‘소해난파’라는 고사성어를 한뼘쯤은 되새겨봐야 할 것 같다.

／홍행기정경부차장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結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書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대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문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